

## 김경수 지사 “빅데이터 기반 AI 행정으로 스마트경남 구현”

- 13일 경상남도,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전략 수립 자문회의 개최
- 데이터기반 AI행정, 민관협력 위한 데이터분석센터 운영방안 토론

경상남도가 ‘데이터 기반 AI 행정’ 구현에 나선다. 경남도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전략 및 플랫폼 구축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김경수 지사가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분석과,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 나이스지니데이터(주) 등 관련 공공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도에서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도정혁신추진단장** 등이 함께 했다.

김 지사는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계획’을 설명한 뒤, 플랫폼과 연계한 ‘데이터분석센터’ 필요성과 플랫폼 구축 시 바람직한 운영모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계획’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공공데이터를 수집·관리·공유·분석·활용 가능한 기반 구축 사업이다. 데이터 중심의 정책을 발굴, 지원하며 기업과 민간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데이터분석센터’는 수요 기반의 활용 가치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생산하여 플랫폼을 통해 개방·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기구다. 데이터랩을 통해 민간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개인별 맞춤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모두발언에 이어 데이터 기반으로 시행정까지 연계하는 데이터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1년간 도정책신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인데, 결국은 행정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 된다”며 “불필요하거나 반복 업무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길게 보면 빅데이터나 시행정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이 데이터 기반 행정 부분은 출발이 늦지만, 앞선 사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며 “늦었지만 스마트경남 구현을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림을 잘 그려나가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특히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익명화를 통한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도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며 “데이터 개방과 정보 활용이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시작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자문단과 함께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데이터 정보 공유와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 조성, 그리고 바람직한 데이터분석센터 운영 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의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전략 및 플랫폼 구축 자문단은 지난달 24일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은화 주무관(055-211-26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